

[종합·해설]

“동남아 노선 2~3편 유치만이 살길”

■ 위기의 무안공항 활성화 방안은

‘국제선 편수 주 42편→24편(43%↓), 일평균 탑승객 500명→370명(24%↓)’

오는 8일로 개항 1년을 맞는 무안 국제공항의 개항 6개월과 1년의 운항 실적이다.

무안공항은 무안~광주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광주공항의 국제선이 이전해 온 지난 5월에만 하더라도 국제선이 주 42편(8개 노선)에 일평균 이용객이 500명에 달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유가 고공 행진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선이 주 24편으로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침체가 확산하면서 무안 공항의 앞길은 암울하기만 한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의 군산 국제공항 건설 추진이라는 또 다른 악재도 만났다.

무안 공항의 지난 1년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짚겠다.

◇뒤로 가는 무안 공항= 지난 해 11 월 8일 호남권 거점공항으로 문을 연 이후, 6개월 동안은 활기를 띠며 조기 안착의 조짐을 보였다.

당초 국제선 주 4편으로 개항한 이후, 반년 만에 국제선이 주 42편으로 늘어났다. 탑승객도 개항 첫 달에는 하루 평균 250명, 3개월째 370명, 6개 월 이후 약 500명을 유지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 지역발전법 국무회의 의결 의미·전망

정부는 4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제정 5년 만에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이름이 바뀌게 됐다.

또 개정안은 기존의 시도 위주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5개년 계획으로 개편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광역·지역발전 회계로 분리됐다.

광역경제권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도간 사업조정을 위해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경제권발전위가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그러나 1년이 다된 지금 국제선은 주 24편으로 반 토막이 났으며, 일평균 탑승객도 최고치를 기록했던 5월(500명) 이후 계속 줄어 370명으로 주저 앉았다.

이는 중국 동방항공이 무안~상해 간 운항을 주 7회에서 주 2회로 줄인 데다 대만 부흥항공(무안~타이페이)도 운항을 중단하는 등 고유가·승객 감소로 적자를 면치 못하던 항공사들이 운항을 감축한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국내선인 무안~제주 간 노선도 폐지됐으며,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 등을 고려하면 무안공항의 앞길은 막막하기만 한다.

◇기준없는 정부의 항공 정책= 3천 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문을 연 무안공항은 당초 전국적인 항공 수요와 향후 수요 변화 등을 감안해 서남권의 거점공항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을 들어 새만금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군산공항을 국제공항으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공사 및 여행업계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항공 시장의 수요 부족을 이유로 군산 국제공항은 타당성이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년전 강릉·속초 공항을 합쳐 국내 동북부 거점공항으로 개항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국제선이 없어진 강원도 양양공항을 그



무안국제공항이 오는 8일로 개항 1주년을 맞지만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선 유치와 홍보로 연장 등 항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선 승객들이 4일 무안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워커뉴스 jrw@kwangju.co.kr

국제선 주 42편→24편, 탑승객 1일 500명→370명으로 ↓

호남 고속철 경유·계류장·수화물 컨베이어 확장도 시급

예로 들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가 무안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정책적 결정을 내려줄 것을 건의해 온 호남고속철의 무안공항 경유 노선변경과 관련,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과제= 무안공항이 경기불

황 등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행객 유인 효과가 큰 동남아 노선 2~3편을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포화상태인 인천 국제공항의 동남아 노선은 무안공항으로 이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끌어내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공항의 기본 시설인 활

주로가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자주로운 3.2km(현재 2.8km)로 연장해야 하며, 계류장도 9면에서 15면으로 늘려야 한다. 또 2편 이상의 항공기가 입항할 경우 화물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국제선 도착출 수화물 컨베이어도 확장이 절실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비수도권 의원 “국회 통과 저지” 진통 예고

남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10개나 배정된 반면 호남은 기존의 계속 사업을 중심으로 5개만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별다른 수정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의 법적 티芥가 무너져 호남의 경제적 낙후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발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비

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저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비수도권 국회의원 모임’은 지난 3일 정부가 개정안을 제출할 경우, 이를 국회의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가균형발전 특위에서 지역발전특별법을 다뤄 법사위 상정 자체를 연기하거나 대폭 수정이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 방

지 및 지역균형발전 촉진 특별법’ 등

의 발의를 통해 정부의 개정안과 병합 심의, 지역발전특별법의 내용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역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예산 대폭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명칭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내용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 ‘수도권 완화 논란’ 계속

박근혜 “지방 상황 너무나 절박”

임태희 “지방소비·소득세 신설”

한나라당 지도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논란 진화에 나선 가운데 당내 세력이 수도권대 비수도권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 날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소비세 신설 등에 대해 “그것도 좋지만 그런 대책을 기다리기에는 지방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원장 역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신설 등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방발전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토론했다”면서 “임 의장은 당이 정부에 대해 지방에 독자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미 요청한 상태이고 정부는 집행할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방 자주재원 확보가 지금부터 당 정책위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은 반드시 당에서 관찰시키겠고 정부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은 국토균형발전이 아니고 국토동반발전 전략”이라며 “정부의 최종발표를 보고 정말 미흡하면 정부를 통해 바꾸려고 해야지, 나오자마자 기자실에 허가를 반대모임을 하는 것은 여당 의원으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협의해 지방발전의 올바른 방향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태희 정책위원장 역시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신설 등 구체적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지방발전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토론했다”면서 “임 의장은 당이 정부에 대해 지방에 독자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이미 요청한 상태이고 정부는 집행할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방 자주재원 확보가 지금부터 당 정책위의 최우선 과제”라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은 반드시 당에서 관찰시키겠고 정부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는 국민 분열 정책”

정세균 대표 복당 추후 논의

관련 “정기국회가 끝난 후 차차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금은 당력을 서민과 종교인층 위한 예산과 법안 등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복당 문제는 논의되도 우선 이운석 의원부터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추경안 통과 시도와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서 보듯 전혀 눈치를 보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에서는 야당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명분을 쌓아갔기 때문에 도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4일 KBS1을 통한 라디오연설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하는 것은 헌법과 명백히 배치되는 국토분열 정책이고 국민분열 정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아울러 예산 수정과 관련, “한나라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들은 예산 증액 방침이 발표되자 1조원이 넘는 지역구 선심성 예산을 요청했다”고 비판한 뒤 ▲부자 감세 포기 ▲부자 세 30% 인하 ▲취약계층 지원 등이 수정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법안의 명칭에 ‘균형’이라는 단어가 추가되고 내용이 대폭 수정되지 않는 한 지역발전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정 대표는 또 이날 광주·전남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 무소속 의원 등 탈당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민주당의 지지를 정체와 관련, 그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아 답답하지만 쉽게 오르지는 않는다. 서서히 오르다가 기폭제가 있으면 갑자기 오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내년 4월 재보선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